

정세분석보고서 2003-02

핵문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2003. 4.

<요 약>

1. 핵사태 이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시도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북한은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음.
 -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관리의 개선’과 ‘실리추구’를 병행한다는 것임.
- 북한의 2002년 7월 조치는 남·북, 북·미, 북·일 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과 발맞추어, 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병행 추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임.
 -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힘만으로는 내부 경제 재건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2002년 10월 핵문제 대두가 북한이 추진한 7월 조치의 직접적인 실패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추진 환경을 악화시켰음.
 - 핵문제 대두에 따른 대외관계의 경색이 외부지원 확보 기회를 위축시킨 것임.

2. 핵사태 이후 북한경제의 상황 변화

- KEDO의 중유공급 중단 조치가 북한의 7월 조치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며 갈수기인 동절기에는 그 여파

가 더욱 심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중유공급의 중단은 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낮은 “한계부문(marginal sector)”의 생산을 저하시켰을 것이라고 평가됨.

○북한의 핵사태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 심화가 남·북간의 관계를 경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 지원 사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3. 핵위기 시나리오와 북한 경제의 향후 전망

○핵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경우,

-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경제지원과 남북경협 활성화 및 대규모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며
- 장기적으로는 대외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할 것임.

○북·미 양국의 기존 입장 고수로 외교적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을 진전시킨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경우,

- 미국은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적 봉쇄를 시도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 침체는 심화될 것임.
- 이에 따라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점차 감소하지만, 단기간 내에 급속한 붕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부적 공격(surgical strike)을 감행하는 경우, 한반도는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 하락, 기업활동 위축, 금융시장 파탄, 외국자본 철수 등으로 남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남북경협은 거의 중단상태에 이를 것임.
-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은 더욱 악화될 것임.

- 목 차 -

I. 문제 제기	1
II. 핵사태 이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시도	2
1. 7월 조치의 배경	2
2. 7월 조치의 내부 경제적 요인과 목적	5
3. 7월 조치의 내용	7
4. 후속 조치와 효과	8
III. 핵사태 이후 북한경제의 상황 변화	11
1. KEDO의 중유공급 중단이 미치는 영향	11
2.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영향	14
3.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17
4. 소 결	19
IV. 핵위기 시나리오와 북한 경제의 향후 전망	21
1. 평화적 해결	21
2. 외교적 해결의 지연	27
3. 무력충돌	31

I. 문제 제기

- 작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KEDO의 중유공급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하면서 북한경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7월 조치가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되면서 가중된 측면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한 측면이 ‘중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은 경제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지만 공급부족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7월 조치는 표류하게 된 것임.
 - 이 와중에서 핵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북한경제를 더욱 압박하게 된 것임.

- 북한이 추진한 7월 조치는 북한경제의 열악한 상황에 비추어 외부세계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었음.
 -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영향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
 - 그 결과, 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던 7월 조치가 주민들의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음.

- 핵문제로 인한 중유공급의 중단과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라는 평가와 관련,
 - 구체적인 검증보다는 추정에 근거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사태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또한, 향후 핵사태의 진전이 북한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하며, 이를 위하여 7월 조치의 성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 향후 전망을 위해서는 핵사태의 해결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것임.

II. 핵사태 이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시도

1. 7월 조치의 배경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북한은 내부 경제 개선과 개방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음.
 - 북한은 2000년 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였고,
 - 이를 기초로 2001년 초부터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 근거한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과 강화’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관리의 개선’과 ‘실리추구’를 병행한다는 것임.¹⁾

- 이는 지난 1999~2000년 시기에 핵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강화 + 실리보장’론에서 변화한 것으로,
-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의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서 확산되었으며,
-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음.²⁾

○2002년 7월부터 대내적으로 새로운 성격의 경제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매우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음.

-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7.1), 신의주(9.12) 및 개성(11.13)과 금강산(11.23) 경제특구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외에도 남북관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 남북당국 간 회담, 경제관련 회담이 재개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작업 및 관련 군사회담 등이 개최되었으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1) 2001년 신년공동사설

2) 『노동신문』, 2001.10.22.

에 대규모 선수와 응원단을 파견하는 등 비당국 접촉에도 활발히 나섰음.

- 또한 8월에는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어 9월에는 일본과 최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평양공동선언」을 채택(9.17)했음.³⁾

○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남·북, 북·미, 북·일 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과 발맞추어, 내부 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 병행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임.

- 이유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힘만으로는 내부 경제 재건의 여력이 없으며, 주변 국가의 호응이 없으면 개방 정책도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동시에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외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내부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임.

○ 그러나,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내부개혁 및 개방의 동시 진행 시도는 2002년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과 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 교착과 함께 동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3)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인함으로써 북·일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일본 여론의 역풍으로 인하여 좌절되고 말았음.

2. 7월 조치의 내부 경제적 요인과 목적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임 및 물가의 전반적 인상’ 조치는 2001년 초부터 시행되어오던 새로운 경제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음.

- 1998년 이후 북한은 중앙집권체제의 복구 및 규율의 원상회복, 생산의 정상화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복원과 내부 경제의 재건을 추진하는 한편,
 - ‘변화된 현실’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선’ 즉, 경제관리체제의 분권화, 채산성 강조, 구조 개편 및 합리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존재했다는 것임.
 - 재정과 자원 고갈에 따라 중앙의 통제능력이 저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 기업소, 개인 단위의 자구 행위 차원의 ‘원심력적 욕구’가 증가한 것임.
 - 특히 국가부문과 농민시장이라는 이중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이 두 부문이 각각 상이한 경제법칙에 따라 유지되고 있음.

- 경제관리시스템의 정상화를 어렵게 만든 것은 이차경제 때문에 화폐의 능동적 기능이 점차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부문과 이차

경제사이에 현격한 가격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는 생산물을 국가에 납부해야할 의욕이 감소하는 대신, 이를 빼돌리고자하는 욕구가 증가하고(재정수입의 감소),
- 설비, 중간재, 원료 등 국가 소유의 재산과 자원을 이차경제로 유출하려는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며(국가재정의 유출),
- 모든 물자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자의 낭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재정부담의 증가),
- 낮은 임금과 엄청난 실질 생계비로 인하여 공식부문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현저하게 저하됨(국가부문의 노동 저하).

○ 이중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취약성은 공식부문에서의 가격과 노임을 이차경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현실화시킴으로써 상당 정도 완화될 수 있음.

- 이를 통한 국가의 재정수입 증가, 국가재정의 유출 억제, 국가재정의 부담 경감, 공식부문에서의 노동의욕 제고 등이 북한당국이 7월 조치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내경제적 목표라고 할 수 있음.

3. 7월 조치의 내용

- 노임 및 물가 인상의 성격은, 국가임금과 국정가격을 이차경제의 생계비 수준과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실화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쌀의 국정가격은 과거 8전에서 당시의 농민시장가격과 거의 동일한 44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본 노임은 과거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음.
 - 이같은 인상 수준은 농민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 실질 생계비에 맞추어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음.⁴⁾

- 2001년 이후 북한은 기존의 계획체계의 분권화, 경제적 인센티브의 강화,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논리는 “아래 단위 창발성 발양,” “계획지표의 합리적 분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허용,” “경제효과성 최대 보장,” “과학기술 발전” 등이 있음.
 - 구체적인 조치로는 북한은 7월 이후, 기업소 내부의 당기구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경영에서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 개인 경작지 확대 및 일부 지역 개인 영농제도 시험적 실시와 함께 생산의욕 증대를 위해 도급제를 강화했음.

4) 국내에서의 탈북자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농민시장 월 평균 지출액은 약 2000원이라고 함.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국은행 조사국, 2002) 참조.

- 7월 조치를 전후해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일 수교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한편,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개성 특구와 금강산 특구 지정을 발표했다.
 - 이는 7월 조치가 대외관계 개선 및 개방 확대와 연계되어 있는 조치라는 것을 보여줌.

- 10월 핵문제의 대두는 7월 조치 성패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나 추진 환경을 악화시켰음.
 - 원래의 정책의도는 7월 조치 이후 남·북 및 북·일관계 개선을 진전시킴으로써, 북한의 이미지 개선과 외부지원 증대를 노리고 이에 의해 내부 물자부족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10월 핵문제 대두에 따른 대외관계의 경색은 추가적 지원 확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켰음.

4. 후속 조치와 효과

- 북한이 7월 이후 취했던 여러 조치는 7월 조치와 호응하며 그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음.
 - 7월 중순부터 장마당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농산물 거래만 허용하는 한편, 국영상업망에서의 식료 공급을 늘이며, 개인들이 팔고자하는 공산품들은 국영상점이 수매하여 판매하는 등 국영상업망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음.
 - 8월초 지방산업 공장의 생산 정상화 및 군(郡)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었으며 8월초 평양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다시 개최되었음.

- 8월 이후 다수의 '연합회사'를 관리국으로 개편하여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구하였음.
- 2002년 동안 전반적으로 공급 증대를 위해서 닭공장, 염소목장을 비롯하여 식료품생산 공장 등의 개건·현대화 사업을 북한 전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했음.

○7월 조치는 부분적으로 성과를 보였음.

- 공장을 떠나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점차로 복귀했으며, 국정가격의 인상에 따라 원료 유출도 감소했음.
- 도급제가 강화됨으로써 생산의욕이 증가했는데, 특히 채취, 전력, 금속, 철도, 운수 등 경제 주요 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에게 누진도급제가 강화되었음.
- 7월 조치 직후, 생활비와 가격 인상을 통한 인센티브 증가에 따라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여 부분적으로 긍정적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7월 임금 인상 및 성과급 강화 조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부문은 석탄 부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7월 조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품공급 확대능력 부재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였는데, 이 부분에서 정책 실패 현상이 나타났음.

- 60~70원하던 장마당 쌀값은 8월초 80~90원으로, 국제지원이 급격히 감소한 12월에는 150원으로 상승했음.
- 물자 공급 능력의 부족에 따라 국영상점 활성화 노력도 무의미해졌으며, 이와 함께 장마당 통제에 대한 주민 불만이 극심해지자 북한당국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장마당에서의 공산품 거래를 다시 허용했음.

○7월 조치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업소들도 생산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노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III. 핵사태 이후 북한경제의 상황 변화

○미국에 의해 북한당국이 핵 개발사실을 시인했다고 발표된 이후 북한경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상황의 악화가 반드시 북한의 핵문제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7월 조치를 통한 변화 시도가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으로써 경제부문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음.
- 다만,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성패가 국제사회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볼 때, 핵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는 7월 조치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북한의 핵사태가 북한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으로는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 조치(2002.11.14)로 인한 에너지난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식량난 심화 등이 거론되고 있음.

1. KEDO의 중유공급 중단이 미치는 영향

- 중유 50만톤은 북한 전력 생산량의 최대 15%에 해당되는 양
 - 중유 50만톤으로 일년간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은 대략 22.3

억kWh(25.5만kW 발전소 가동시)에서 최대 30.6억kWh(35만 kW 발전소 가동시)

- 이를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연간 발전량 201.5억kWh (2001년말 기준)과 비교하면 11.1~15.2%에 해당되는 양임.
- 따라서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 조치는 북한의 전력 생산량에 최대 15% 감소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됨.

○ 중유는 주로 7개 화력발전소에 분배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 중에서 선봉화력발전소는 중유를 연료로 가동되고 있으며, 청진과 동평양, 영변, 북창, 평양, 순천 등 6개의 화력발전소에서는 무연탄과 중유를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음.
-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1999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⁵⁾ 중유공급분 중에서 59%를 선봉화력발전소가 소비하고, 북창화력발전소가 15%, 평양화력발전소가 15%, 청진화력발전소가 5%, 동평양화력발전소와 순천화력발전소가 각각 2%, 영변의 열병합발전소가 1%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중유공급의 중단은 일차적으로 이들 발전소에서 전력과 난방을 공급받는 지역의 산업시설과 주택들의 전력과 난방 상황을 악화 시킨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선봉화력발전소의 경우 KEDO의 중유공급에 전량을 의

5) GAO, 「NUCLEAR NONPROLIFERATION: Status of Heavy Fuel Oil Delivered to North Korea Under the Agreed Framework」, September 1999.

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선봉화력발전소에 의지하고 있던 나진·선봉공업지구의 중공업, 경공업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 또한 평양의 난방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한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중유의 대부분이 KEDO에서 공급되는 중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유공급의 중단은 평양지역의 난방공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중유공급 중단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전력생산량을 10~15%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임.

- 따라서 전력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의 경우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인하여 거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볼 때,
- 오히려 전력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중유공급의 중단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에너지 소비가 군수산업과 외화벌이 업체, 일반 중공업 산업시설, 경공업시설, 주민들의 순으로 배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유공급의 중단이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낮은 “한계부문(marginal sector)”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생산단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단위의 공장이나 산업시설에 미치는 효과가 더

욱 클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반주민들의 주택에 배급되는 전력량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일반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도시나 주요 공업단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소 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열악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KEDO의 중유공급 중단조치가 북한의 주요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KEDO가 공급한 중유가 북한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원의 측면에서는 2~3%에 불과하며, 북한경제가 수년 동안 내핍경제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임.
- 따라서 KEDO 중유의 공급 중단 조치가 북한의 산업생산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현상은 수력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동절기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됨.

2.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영향

○2002년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2억 5,727만달러로 2001년의 3억 5,725만달러에 비해 28%가 감소하였음.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유엔기구, 국제적십자연맹, 개별국가 등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엔기구의 2002년 대북지원 실적은 한국을 포함하여 2억 1,920만달러에 달했음.
 - 이는 목표금액의 88.8%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의 실적율인 64.6%에 비해 24.2% 증가한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 유엔기구의 대북지원에서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의 경우 신규 조성액 1억 679만달러에 이월금액 9,932만달러를 더한 2억 611만달러가 북한에 지원되었음.
 - 이는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WFP의 대북지원 실적이 전체 유엔기구의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을 포함한 유엔기구가 추진한 지난 2년 동안의 대북지원 실적과 2003년의 기금모집 상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목표액이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호사업 수요가 증가하여 대북지원 여력이 감소한 것과 함께,
 - 대북지원의 주요 공여국인 일본이 일본인 남북문제와 핵개발

의혹 등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2002년부터 대북지원을 중단해 왔기 때문임.

- 따라서 대북지원양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감소한 것은 핵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을 어렵게 만든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임.

- 특히, 30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던 일본이 작년 이후 WFP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에 기부를 중단했으며,
- 최대 지원국이었던 미국이 작년 하반기 이후 WFP의 식량지원 요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역시 북한의 핵문제 이후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음.

○ WFP가 추진해온 대북식량지원계획이 2003년 초에 들어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지만⁶⁾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기금의 조성실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3월 5일 현재 기준으로 목표의 7%에 불과한 금액만이 확보된 상황이었으나 20여일이 지난 3월 24일 현재에는 WFP의 기금 확보 실적이 19% 수준으로 급상승하였음.
- 이는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

6) 북한에 대한 WFP의 식량지원사업은 국제적인 지원량의 감소로 인하여 2002년 하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 바, 이에 따라서 9월 이후 계획대상 640만명 중에서 300만명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였음.

회에 요청한데 반응하여 지원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7)

<UN기구의 대북지원 실적과 조성금액 현황>

		WFP	기타 유엔기구	전체 합계
2001년	지원요청금액	3억 1,592만달러	6,806만달러	3억 8,398만달러
	조성금액 (실적율)	2억 4,008만달러 (76.0%)	789만달러 (11.6%)	2억 4,797만달러 (64.6%)
2002년	지원요청금액	2억 1,673만달러	3,011만달러	2억 4,684만달러
	조성금액 (실적율)	2억 611만달러 (95.1%)	1,309만달러 (43.5%)	2억 1,920만달러 (88.8%)
2003년	지원요청금액	1억 9,717만달러	2,806만달러	2억 2,523만달러
	조성금액(실적율) 2003.3.5 현재	1,410만달러 (7.2%)	493만달러 (17.6%)	1,903만달러 (8.4%)
	조성금액(실적율) 2003.3.18 현재	1,593만달러 (8.1%)	668만달러 (23.8%)	2,262만달러 (10.0%)
	조성금액(실적율) 2003.3.24 현재	3,716만달러 (18.8%)	789만달러 (28.1%)	4,505만달러 (20.0%)

출처: <http://www.reliefweb.int/fts/reports>(Financial Tracking System Database)

3.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경제부문에서는 가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올해 남북한간의 교역과 우리의 북한

7) 미국 식량지원 재개 발표(2.21), 호주 180만달러 상당의 밀 제공 발표(2.25), 한국 1,800만달러 상당의 옥수수 10만톤 지원 결정(3.17)

에 대한 지원실적을 분석하고자함.

○2003년 1~2월중 남북교역액은 8,875만달러로 전년의 같은 기간의 실적 5,614만달러에 비해 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⁸⁾

- 특히 기계류,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출액이 5,203만달러에 달해 전년의 동기대비 157.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남북교역에서 거래성 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하고 비거래성교역은 218.2%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비거래성교역의 증가가 남북교역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비거래성교역은 경수로사업물자와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 및 기타 협력사업 물자로 구성됨.

○2003년 1/4분기중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실적은 총 1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6억원에 비해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⁹⁾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실적 증가는 「한적」 창구를 통한 지원이 작년에 비해 400% 증가에 기인한 것임.

○이처럼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사업은 북한의 핵문제에

8)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역과, 「2003년 1-2월중 교역동향」, 2003.4.9.

9) 통일부 인도지원국 인도지원기획과, 「2003년 1/4분기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2003. 4. 7.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북측이 ‘민족공조’를 강조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4. 소 결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 조치는 7월 조치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며

-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상품의 생산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 국가경제 전체차원에서, 특히 주요 산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미국과의 대결 심화라는 정치적인 함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의 핵사태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3월초까지만 해도 확보실적이 7%에 불과해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문제의 여파로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 이후, 주요 국가들이 유엔의 요청에 따라 지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예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 심화가 남·북간의 관계를 경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분야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핵사태 이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경제 내부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중유공급의 중단이 북한의 산업생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핵사태로 북한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외국인의 대북 투자를 위축시킴으로 인해 7월 조치 이후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북한당국의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할 수는 있음.
 - 따라서 북한의 핵사태는 주민들의 생활에 주로 악영향을 미쳤으며, 간접적인 형태로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IV. 핵위기 시나리오와 북한 경제의 향후 전망

○현재의 북한 핵문제는 이라크 전쟁 이후 가장 주요한 국제적 안보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전개방식에 따라 북한 경제에 미치는 방식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1)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2) 외교적 해결의 지연과 북한의 핵개발 진행, (3) 핵 의혹시설 공격 등을 포함한 무력 충돌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그것이 북한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1. 평화적 해결

가. 기본 구도

○평화적 해결이란 북한이 다자적 대화의 틀에 참여해 핵개발 동결 및 확산금지에 동의하고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에 이르는 경우를 뜻함.

- 또한 북한측이 북·미간 단독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자적 대화 틀 속에서 현안에 따라서 북·미 직접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함.
- 다자적 대화에는 북·미 뿐만 아니라 남한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참여하며, 이들이 핵문제 해결 및 합의안 준수과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공유하도록 함.

○ 핵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경제지원과 남북경협이 활성화 및 대규모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방 확대와 경제구조의 개혁을 모색할 것임.

- 그러나 구체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타협안 도출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북한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

- 다만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경우,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경제 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나. 국제사회의 지원 및 남북경협이 활성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경제지원 확대>

○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 1월 20일과 2000년 6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정보, 재정거래, 무역거래 분야에서 부분적인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했음.

-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핵문제의 대두로 이같은 완화 조치는 실질적 내용 진전을 보지 못함.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치

들을 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정부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 확대 및 의료지원 개시
- 화력 발전소 건설과 중유공급 재개 등을 통한 에너지원 제공
-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와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지원에 대한 비토권 철회

○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포기 대가로 미국은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핵문제로 중단한 중유공급을 재개·확대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에 합의함.

- 이는 경수로 건설의 시간소요를 감안한 것으로서 북한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진행중인 경수로건설사업은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함.

○ 미국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과 비정부기구를 통한 우회지원 가능성을 강구하는데 나설 수 있음.

- 신탁기금은 코소보, 동티모르 등 국가형성 이전단계의 지역에 지원된 바 있는 특별지원으로서, 재정, 거시경제, 법·제도, 채무 등에 관한 기술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됨.

○ 미국은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금융지원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작업을 개시할 것임.

- 미국 기업의 대북한 교역을 위한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불 보증 및 수출신용공여
-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 또는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 nation) 부여

<국제사회의 지원>

-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을 지지하고 북·일 수교가 진전되는 경우, 이에 따른 국제적 대북 경제지원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임.
-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은 피폐한 북한 경제상황을 개선할 재원으로 활용될 것임.
 -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은 전기,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농업기반 구축에 시급히 활용될 것이며,
 - 건강과 보건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핵문제의 타결은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양국관계의 정상화는 막대한 일본자금의 북한 유입을 의미함.
 - 북·일관계의 정상화가 의미하는 것은 거액의 배상금 지원,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의 증가, 북·일교역의 활성화 등이며,

- 이를 통해서 북한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북한의 대일채무 불이행 문제 해소에 따른 일본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배상공금 지급을 통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재건사업의 추진 등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 활성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감소시켜 남한 경제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내기업들의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여건도 개선될 것임.

- 현대의 금강산 특구개발, 개성공단 건설, 평양·남포 공단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공단내 국내외 기업의 본격적 진출이 기대됨.
- 특히 현대 이외의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대북 진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 이와 함께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

○당국차원의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의 산업기반시설 개선작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

- 북한지역의 SOC 개선작업은 북한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하

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며,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남북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및 개량사업,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와의 연계망 건설, 북한통과 가스관 설치공사 등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것임.

다. 경제부문에 대한 영향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임.

- 식량과 에너지문제의 완화는 북한당국의 경제체계의 개선과 대외개방 관련 정책을 촉진하게 될 것임.
- 그러나 북한당국은 가능한 체제에 부담이 되는 구조적 개혁은 늦추면서 우선적으로 국제적 지원 증대에 초점을 맞출 것임.

○중기적으로는 투자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국제자금의 유입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됨.

- 평양과 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 이를 기초로 개성공단, 금강산 특구 등 특수경제지역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며,
- 한반도의 횡단철도 건설과 육로의 개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북경협이 한 단계 격상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개혁과 경제체질의 개선작업에 돌입하게 될 것임.
 - 이 과정에서 북한은 법적·제도적 개혁과 국영기업의 개혁 및 소유제도의 다양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임.

2. 외교적 해결의 지연

가. 기본 구도

- 북·미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외교적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적·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개발을 계속해서 진전시킨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임.
 - 미국은 대북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적 봉쇄를 시도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 침체는 심화될 것임.
 - 이에 따라서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점차 감소하지만, 단기간내 급속한 붕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
-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가동은 한반도의 위기를 높임으로써, 남북경협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한 지원사업을 위축시킬 것임.
 -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해 북한 해군의 NLL 월경, 무장간첩선 침투, 동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훈련 등의 방식으로 보복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에 긴장이 고조됨.

나. 북한의 경제침체 지속

<미국의 경제봉쇄 강화>

○ 외교적 해결 지연과 북한의 핵개발 진행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강화로 연결될 것임.

-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 러시아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들 국가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는 힘들.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미사일 수출 봉쇄로 확대될 가능성 높은 바, 북한의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 차단되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임.

<국제사회 지원의 감소>

○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 진행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키게 될 것임.

-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 또한 북한에 대한 투자의욕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임.

○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일본내 여론악화로 인해 북·일수교 교섭은 무망하게 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중단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북한으로의 송금 중단 조치가 지속되고, 일본기업의 대북투자는 불가능하게 될 것임.

○ 다만, EU는 북한 핵개발 반대와 대북한 경제제재를 동시에 반대하면서 식량지원 지속 의사를 밝힌 것처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대북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임.

- EU 의장국인 그리스의 Tassos Giannitsis 외무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지속 의사를 밝힌 바 있음(2003.2.26).

<남북경협 위축>

○ 북한 핵개발 지속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적 감정의 악화로 인해 남북경협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한반도의 긴장 격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경제에 대한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¹⁰⁾

10)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등 추가로 도발적인 행위를 벌일 경우 신용등급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연합뉴스, 2003.4.3). 무디스 관계자는 또한 “플루토늄 재처리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행위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반응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돌파구가 열리지 않은 현상태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함.

- 이는 외국자본의 투자 감소 또는 철회, 국내 기업의 생존력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남북경협 사업의 여건을 악화시키게 될 것임.

○기 합의된 남북경협은 지속되겠지만 민간기업들이 사업 확대 또는 새로운 사업 진출을 꺼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침체상태에 빠지게 됨.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나 핵 실험 등과 같이 새로운 사태로 발전할 경우, 국내외 여론의 악화와 함께 남북경협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음.

다. 경제부문에 대한 영향

○외교적 해결의 지연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불이익이 북한 체계를 급속히 붕괴시킬 수는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보다 악화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

○북한은 축소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매달리면서 내부적으로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상황을 모면해 나가고자 할 것임.

- 경제난의 완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

편적 대처를 모색할 것이며,

- 이 과정에서 식량난 악화, 암시장 확산, 국유기업의 가동 중단 등으로 공식경제의 동공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의 남한 경제의존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남한 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경제적 의존현상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 또는 확대를 둘러싸고 남한 국내여론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음.

3. 무력충돌

가. 기본 구도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부적 공격(surgical strike)을 감행하는 경우를 상정함.

- 이 경우 한반도가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국부적 공격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한반도의 긴장은 매우 격화되고 장기화됨.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고도의 경제제재를 수반할 것인 바,
- 미사일 수출 선박의 나포, 인터폴을 통한 마약 밀매단 체포

등 외화소득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함.

나. 북한경제의 고립 심화

-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봉쇄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
 - 중국과 러시아 및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며,
 - 북한과 무기 등 전략물자를 거래한 국가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구할 것임.

- 일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제외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협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음.
 - 남한은 EU와 함께 과거와 유사하거나 다소 적은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유지함.

-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남한 경제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이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기업활동 위축, 금융시장 파탄, 외국 자본 철수 등으로 남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태 발전은 남북간의 교류협력 중단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이로 인해 북한 경제의 고립화는 가속되고 경제난은 더욱 악화될 것임.

다. 경제부문에 대한 영향

-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 및 평화번영정책 덕분에 남북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증대되기도 하였지만, 무력충돌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남북한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내구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 남한경제의 자생력이 떨어져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 경제의 상황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1990년대 중반의 경제상황보다 더 악화될 것이며, 북한사회 내부의 혼란과 이탈현상은 가중될 것임.
 -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공식이념의 사회통합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 ‘기근열차(famine train)’로 상징되는 생존을 위한 주민 이동과 통제계층-주민 간의 적대감이 확산될 것이며,
 - 산업전반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움 가중과 사회통제기구의 기능 저하 및 비공식 정보유통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확대될 것임.

- 요약하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실패는 북한 경제에 대한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의 침체와 남북경협 위축

에 따른 간접적 효과를 낳을 것임.

- 평화적 해결의 실패라는 범주에는 무력충돌과 외교적 해결 지연을 포함함.

연구책임자: 임강택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성철 선임연구위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